부산상공회의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3년 9월 26일(화) 14:30 이후

담 당 : 경제정책본부 김형규 차장
(990-7092)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 출범식 개최

연내 산업은행법 개정 위한 부울경 경제계 주도 추진협의체 발족

- ▶ **추진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에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 공동대표로 울산창원상의 회장 참여**
- ▶ **산업은행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상징 사업으로 부산을 넘어 동남권 공동발전의 마중물 역할**
- ▶ **정부와 여당은 지방시대, 야당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 주장한 만큼 산업은행 이전에 여야 따로 있어선 안 돼**

산업은행 본사 부산이전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산업은행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 상공계가 주도하고, 학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은행부산이전추진협의회'가 출범하였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26일(화) 14시,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대표를 비롯한 상공계, 학계, 시민사회 오피니언 리더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은행부산이전 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가 지난 5월 산업은행을 부산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사실상의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으나, 본점의 위치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의 개정이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부·울·경 경제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추진협의체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추진협의회는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장인화 회장을 포함한 9명의 공동대표와 10명의 고문 그리고 23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부산을 넘어 동남권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큰 틀에서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구자천 창원상의 회장이 공동대표로 참여하여 힘을 실었다.

이날 추진협의회는 출범선언문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향후 포괄적인 공공기관 이전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시대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동남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발전 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야당도 지난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 마련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핵심과제로 추진하였던 만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첫 걸음인 산업은행 부산이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추진협의회에 울산과 창원상의도 공동대표를 맡음으로써 산업은행 본사이전은 부산은 물론이고 동남권 전체의 경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큰 명분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여·야의 합의를 빠르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설득 논리를 적극 개발하여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산업은행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추진협의회는 조속한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해 여·야 지도부 및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 릴레이 형식의 기자회견과 성명발표 등 연내 산은법 개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첨부 : 1. 행사개요(출범선언문 포함) 1부
2. 사진 자료 1부(행사 종료 후 별도 송부). 끝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 출범식 개최 개요

1 행사 개요

❍ **일　　시** : 2023. 9. 26.(화) 14:00~15:30

❍ **장　　소** :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

❍ **참석대상** : 30여명

– 추진협의회 :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등 30여명 내외

❍ **주요내용** : 출범식, 운영회의

– 출범식 :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출범선언문 낭독 등

– 운영회의 : 향후 계획 논의 등

2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3:45~14:00	15′	• 티타임 및 행사장 이동	접견실(8층) → 국제회의장(2층)
14:00~14:05	5′	• 개식 및 참석자 소개 - 참석자 소개	
14:05~14:15	10′	• 인사말씀 - 상임공동대표(회장님) • 주요발언 - 공동대표 4인	장인화 회장(인사말씀) 박재율 대표(발언) 도덕희 총장(발언) 전호환 총장(발언) 조용언 대표(발언)
14:15~14:25	10′	• 출범선언문 낭독(4인)	김민지 코스포 회장 김창균 바르게살기 회장 최효자 부산여상단체협의회 회장 이영활 상근부회장
14:25~14:30	5′	• 구호제창(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4:30~15:30	60′	• 운영회의	회장님 주재
15:30~	1′	• 폐회	

3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비 고
공 동 대 표 (9명)	장 인 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상임공동대표 경제계
	이 윤 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경제계
	구 자 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경제계
	허 현 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 회장	회장	경제계
	심 상 균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회장	경제계
	박 재 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시민사회계
	조 용 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시민사회계
	도 덕 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학계
	전 호 환	동명대학교	총장	학계
고 문 (10명)	강 병 중	넥센그룹	회장	경제계
	송 규 정	㈜윈스틸	회장	경제계
	신 정 택	세운철강㈜	회장	경제계
	박 인 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	시민사회계
	조 정 희	부산여성소비자연합	상임대표	시민사회계
	차 정 인	부산대학교	총장	학계
	장 영 수	부경대학교	총장	학계
	이 해 우	동아대학교	총장	학계
	허 남 식	신라대학교	총장	학계
	강 의 구	부산영사단	단장	기타
운 영 위 원 (23명)	이 영 활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경제계
	김 민 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동남권협의회	회장	경제계
	도 한 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시민사회계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비 고
	신 한 춘	한국자유총연맹부산시지부	회장	시민사회계
	안 지 훈	부산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시민사회계
	오 문 범	부산YMCA	사무총장	시민사회계
	김 정 환	부산YWCA	사무총장	시민사회계
	최 효 자	부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시민사회계
	조 창 용	부산자애인총연합회	회장	시민사회계
	김 종 성	부산청년연합회	회장	시민사회계
	양 미 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사회계
	정산스님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시민사회계
	최 옥 주	부산여성정책연구소	이사장	시민사회계
	최 효 자	부산구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시민사회계
	제 종 모	부산광역시 새마을회	회장	시민사회계
	김 창 균	바르게살기운동부산시협의회	회장	시민사회계
	김 만 률	부산노인대학협의회	회장	시민사회계
	이 정 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협회장	시민사회계
	권 명 준	부산을가꾸는모임	회장	시민사회계
	이 경 신	부산발전시민재단	이사장	시민사회계
	오 수 연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시민사회계
	김 평 수	부산민예총	이사장	시민사회계
	박 주 현	부산시청년연합회	회장	시민사회계

4 출범선언문(안)

21대 정기국회 산업은행법 개정으로
산업은행 부산이전 완성하자!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중추관리 기능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 지역 청년과 인재의 유출 방지 등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그 중에서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의미와 효과는 엄청나다. 지난 대선 때 주요 여,야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공약한 것으로 향후 포괄적인 공공기관 이전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나머지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후속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산업은행을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돼있는 부산으로 옮김으로써 유기적인 협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그리고 7월, 산업은행은 이전 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필수 조직 외에 모든 기능을 부산에 이전하는 내용을 발표 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산업은행법 개정이다. 하지만 산업은행법 개정은 답보상태다. 지역균형발전이나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여·야를 막론하고 당연히 산업은행법 개정에 나서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은가.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부산·울산·경남권을 또 하나의 발전 축으로 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면서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정 핵심정책으로 줄곧 추진해 왔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민주당의 주요 의제고 가치다.

따라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부산을 비롯한 울산과 경남의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해 여,야 지도부의 협의와 일부 의원들의 설득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법 개정을 할 수 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산을 국제금융중심 도시로 성장시키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특히 부산은 대표적인 항만도시로 국내·외적으로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는 서울 일극주의가 아닌 부산과 서울이 함께 성장하는 금융중심지 정책으로 국가 전체의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야는 국제금융 역량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국가발전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21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을 완료할 것을 거듭 요청 드리고자 한다.

이에 부산지역 상공계를 비롯하여 학계,시민사회 등 각 계 각 층이 시민들과 더불어 손을 맞잡고 오늘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 출범을 선언하며 산업은행법 개정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 9월 26일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